

쫓개진 광복절… 야권 “尹, 친일 매국정권” 총공세

민주 “독립투쟁역사 부정”
“대한민국 정체성 흔들려”
‘역사쿠데타저지TF’ 구성
與 “野, 친일 선동 멈춰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으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두 개로 나뉘어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야권은 15일 윤석열 정권을 ‘친일 매국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효창공원 독립운동가 묘역을 참배한 뒤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고 선열의 독립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광복절이지만 올해는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윤 정권이 자행 중인 역사 쿠데타로 독립 투쟁의 역사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역사 시계 바늘은 해방 이전으로 퇴행했다”며 “(윤 정권이) 오므라들고 그릇에 강제동원피해자들의 피 눈물을 팔아넘겼고 후쿠시마 핵오염수와 일본 위안부, 사도광산 문제까지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줬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역사에 일찍이 이처럼 파렴치한 친일 매국정권은 없었다”며 “역대 최



이종찬 광복회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회 주최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뉴스시스

악의 반민족·반역사적 정권 아니냐. 이런 정권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권역사쿠데타저지TF(태스크포스)’를 띄워 독립 정신을 독립 정신을 계승·발전하는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최민석 대변인도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광복정신을 모욕하는 작태를 멈춰라”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정부 요직을 장악한 정신적 일본인들을 견어내고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에 대한 편향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차마 고개들 수 없는 부끄러운 광복절”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진

진을 역행하고 있다.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 ‘퍼주기’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행보를 멈춰 세우는데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정권 대일 굴종외교 규탄 및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밀정 정권 축출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일제 밀정 같은 자들을 요직에 임명한 자가 바로 왕조 밀정”이라며 “바로 저곳 세종문화회

관에서 열리는 정부의 8·15 기념식 단상 가장 가운데 앉은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정부 주최 행사에 불참한 야당이 ‘친일몰이’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에게 “(야당이) 이렇게 불참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참을 하면서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누구보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장의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등 야당 역시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쁜 날인 오늘까

지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적 선동에 여념이 없다”고 논평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은 터무니없는 친일몰이가 아니라 극일을 넘어 G7, G5 국가 대열에 어찌 합류하는가 일 것”이라며 “이제 좀 정치가 품격있게 바뀌자”고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선 분열된 광복절 모습에 부끄러움을 나타내며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하나로 뭉쳐야 할 광복절에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 영웅들의 영전에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광복절의 정정과 분열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용태 의원은 전날 JTBC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김 관장 지명 철회를 하시는 게 맞다”며 “우리의 역사관이나 민족적 자부심을 훼손할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광복회나 순국선열 후손분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잘 귀담아듣는 것이 보수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

광복절에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 단체의 기념식이 따로 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분단체제선 광복 미완성”… 통일 독트린 발표

79주년 광복절 경축사

北에 대화협의회체 설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며 남북당국간 ‘대화협의회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밝혔다.

3-3-7 구조의 이른바 ‘윤석열표 통일 독트린’으로 3대 통일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3대 통일비전으로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 변영에 기여하는 나라 등을 제시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은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 변화, 국제사회 연대’가 골자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세 가지 과제”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변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광주시의원들, 김형석 관장 사퇴 촉구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14일 ‘뉴라이트 논란’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청 광장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과 명예회복을 외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김형석 관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연이어 임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정부는 역사교과서 수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자들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회장에 임명했다”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역사해석과 방송통신을 맡기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현 기자

야권 “윤, 日 사과 요구 없이 국민 갈라치기”

‘반자유·반통일 세력’ 언급 비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자유·반통일 세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회 주최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통합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기초로 미래로 나아가야 될 텐데, 아직도 통치 이념을 잘못된 이념에만 국한해 철저하게 편 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 “애국보수단체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전혀 없다”며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인식을 갖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아예 귀를 닫은 모양”이라며 “아니면 내재된 친일 DNA를 숨길 수 없는 것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변인은 “광복절 경축사는 모두에서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

술했지만 틀에 박힌 문장에서 진심이라고 한 톨도 읽어낼 수 없었다”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일제’ 또는 ‘일본’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 독립과 광복 과정을 기술한 내용에서는 전무하고, 통일 얘기를 시작하면서 ‘일제의 패망’이라고 딱 한번 쓰고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확인한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목불인견”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분열을 획책했지만 국민은 반윤석열로 통합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오늘이 며칠인지 의아했다”며 “일본 제국주의 침탈과 위안부, 강제징용, 독립투사들에 대한 위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는 단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대북 메시지만 가득하다. 현충일이나 6·25 메시지만 줄 알았다”며 “뉴라이트들이 송양하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광복절에는 독립투사와 그 유가족을 위로했다. 다른 보수 대통령도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측 사과와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더 이상 수탈과 인권 유린 등 강점기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오늘 준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말 궁금한 것은 ‘왜 이 시점에 느닷없이 대북 메시지만 잔뜩 냈는가’라며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다. ‘친일’을 ‘북한’으로 덮으려는 알박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며 “피로 쓴 역사를 허로 지을 수 없다”는 이종찬 광복회장 말씀을 윤 대통령에게 크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의원은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갈라치기를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내부와 남북한, 국제사회까지 니편과 내편으로 갈라치는 분열책동의 끝판왕으로 등극했다”고 꼬아붙였다.

김 의원은 “오늘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죽어가는 권력의 ‘마지막 발악’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탄식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권향엽,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은 15일 야당 의원 64명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인·왜곡·허위사실 유포 행위 금지 △평화

의 소녀상 등 관련 기념물 훼손 금지 △방송, 통신, 기타 출판물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형물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평화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